

무용예술계의 돈화(敦化), 가능한가? (2)

문예진흥기금 지원제도와 무용협회

이근수 · 경희대학교 교수 | 무용평론가

1973년, 문예진흥원이 설립된 목적은 문예진흥기금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연구·보급 활동을 지원하자는 데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 지난 30년간 각종 공연과 영화·전시회 등 문화행사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각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 초기의 척박한 문화예술 풍토에서 이 기금이 무용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관객층을 확대시키며 예술 감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무용예술을 지탱해 온 보루가 되어 왔다는 공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예진흥원의 설립 목적

예술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양끝에 예술창작자 즉 예술가와 예술향수자인 관객이 있다고 보면 이 양극단을 연결하는 중간부분에 예술지원단체들과 예술경영자 그리고 평론가들이 존재한다. 예술지원단체의 중심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있으며 한국무용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그 주변에 위치한다. 1973년, 문예진흥원이 설립된 목적은 문예진흥기금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연구·보급 활동을 지원하자는 데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 지난 30년간 각종 공연과 영화, 전시회 등 문화행사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각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 초기의 척박한 문화예술 풍토에서 이 기금이 무용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관객층을 확대시키며 예술 감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무용예술을 지탱해 온 보루가 되어 왔다는 공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예진흥원의 모델은 아마도 1964년 미국에서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Arts & Cultural Development Act)에 근거하여 그 이듬해에 설립된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미국의 NEA는 지난 40년간 무용을 비롯한 미술, 음악, 연극, 오페라, 문학 등 모든 예술분야에 걸쳐 예술가 및 예술 향수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펼쳐 왔다. 지원규모는 연간 약 2천억 원에 달했던 1992년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연간 1,400억 원 정도를 운영하면서 예술진흥을 위한 국가지원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문예진흥원의 총 지원규모는 물론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연간 400억 원 규모이다. 무용부문만 한정해 볼 때는 6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이도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중단됨으로 인해 새로운 자원을 모색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있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순수예술의 활성화가 문화산업에 있어 국제경쟁력의 토대가 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인식을 볼 때 문화예술분

야에 대한 국가지원은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문제는 이 기금이 과연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과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 부문의 개혁 없이 무용계의 돈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의 인식 일 것이다.

문예진흥원의 무용지원시스템

1월에 발표된 2004년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놓고 아직까지도 논의가 분분하다. 지원대상이 편중되게 선정되었다는 비판으로 시작된 것이 심의절차가 불합리하다는 해묵은 쟁점으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심의결과가 발표된 후엔 늘 따라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 수를 늘리고 지원 분야를 세분하고 인터넷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고 진흥원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심의제도의 구조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 현 제도의 골격은 지원신청의 일괄 접수마감, 심의 직전 심의위원들의 비밀통고, 서류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 일괄 결정방식으로 되어 있다. 심의기간이 1박 2일이라지만 실제로는 한나절 동안에 심의하여야 할 지원대상이 분야별로 수백 건이 넘으며 지원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골격 하에서는 심의의 테크닉을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다 해도 효과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 최선의 결과라야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래서 비판을 잠재우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2001년도 무용분야 심의에서 심의위원장 역할을 맡은 바 있는데 9명의 위원들이 점심 식사 후 심의를 시작하여 자정 전까지 11개 지원 분야의 300건이 넘는 신청서를 처리해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빛진 것처럼 뇌리 속에 남아 있다. 그러면 무슨 묘수가 있을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수월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고 자세하게 심의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제도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첫째로 신청서 마감시한을 분산시킬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서 무용제(페스티벌) 지원은 9월 30일, 창작공연 지원은

12월 31일, 해외연수나 국제교류 지원은 3월 31일, 무용연구와 학술 지원은 6월 30일 등으로 활동의 성격에 걸맞게 배분해 주는 것이다. 참고로 NEA는 무용지원에 대해서 2004년의 경우, 신청 분야의 성격에 따라 3월 15일, 6월 1일, 6월 14일, 8월 16일 등으로 4가지 마감시한을 설정해 놓고 있다. 지원신청에 대한 상시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와 같은 일정 에 따라 분기별로 심의하는 방법도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지원신청서에 대한 1차 심의는 문예진흥원에서 담당할 것을 권장한다. 1차 심의는 신청 서류의 적합성, 신청자별 과거 지원 및 수혜 실적, 지급된 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이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한편 심의기간을 늘여 주어야 한다. 대형 무용제 지원이나 해외연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외에 인터뷰 심의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로 현재의 지원 분야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세분화된 분야별 구분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청자나 심의위원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지원 대상 분야를 무용창작 지원, 페스티벌 지원, 교육 및 연구 지원, 관객개발 지원 등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일인이 동일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 복수로 신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다. 각 분야의 차별화된 특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청서 작성요령과 선정기준, 사후보고 요령



도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액이 지원된 창작공연 지원과 페스티벌 지원 등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지원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사후평가는 현재와 같이 형식화되고 있는 모니터링 제도나 평가위원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보다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유료관객 수, 보도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무용가에게 지원된 4천만 원의 금액 중 1천만 원이 대문짝만한 얼굴사진들로 채워진 팸플릿 제작에 들어가고 매년 수익 원을 지원하는 페스티벌이 몇 십 명의 초대관객들 앞에서 초라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소중한 지원의 낭비가 아닌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현상들이다.

다섯째로 심의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심의과정 전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심의를 촉진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심의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정선하되 1회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임기제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구체적인 회의록을 유지하되 심의위원회의 선정기준, 각 위원들이 수행한 역할을 명확히 밝혀주고 지원 신청 건별로 선정이유와 탈락이유를 회의록에 남김으로써 편파성 혹은 나뉜 먹기식의 선정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심의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청자 또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후에 공연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작품에 대해 추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후지원 제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란 명제는 '공평성'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평성 개념이 종종 골고루 분배한다는 의미로 오용되는 풍토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인 자세로 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예술진흥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책임성과도 상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예진흥원의 위원회식 개편만이 능사가 아니다. 본질을 이해하고 실질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지원제도 개편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한국무용협회, 상생의 리더십이 탄생되기를

문예진흥원이 주도하는 직접적인 기금지원제도 외에 공연 행사를 주관하고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외곽단체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이들이 주관하는 거국적 행사들이 예산을 쓰기 위한 연례적 행사가 되고 수상자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문예진흥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무용예술과 무용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많은 협회와 학회들 중에서도 1961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무용협회가 대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무용협회는 전국 60여 개 지부에 1,6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국조직으로 서울국제무용제, 젊은인무자창작공연,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전국무용제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무용제를 표방하면서 이 단체가 주관하는 국가적 규모의 서울국제무용제는 그 행사규모의 방대함과 25년에 이르는 장구한 연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현대무용제(MODAFE; 현대무용협회)나 SI DANCE(유네스코한국무용협회)에 비해서 공연작품의 질적 가치와 행사 진행의 조직성, 심의의 공정성과 관객의 호응도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문스태프의 부재와 1991년부터 변하지 않는 협회 리더십, 이를 방관하는 감독기관의 무관심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 지적할 수 있겠다.

내년 초로 예정되어 벌써부터 열기를 띄고 있는 새 회장 선출이 단지 4기 연임된 회장만을 바꾸는 표면적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용의 주류 예술회를 추진하고 진짜 예술가를 키워내는 토양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생의 리더십이 탄생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